

이슈페이퍼

KEEI ISSUE PAPER

이슈페이퍼 22-04

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
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 연구

김창훈·이수민



KOREA



ENERGY



ECONOMICS



INSTITUTE



에너지경제연구원
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

이슈페이퍼 22-04

**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
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 연구**

김창훈·이수민
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□ 연구의 필요성

- 탄소중립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 - 전 세계 지속가능금융의 규모는 2020년에 7,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19% 성장
- 투자 신뢰성 및 에너지전환 기여도 정립을 위해 ‘녹색 활동’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, 각 산업부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체계(Taxonomy) 수립이 본격화됨.
 - 분류체계 수립에 있어 에너지전환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공하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, 국가산업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은 미흡

□ 연구의 목적

- 주요국, 특히 완성된 분류체계를 발표한 EU나 중국 및 상세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CBI(Climate Bonds Initiative)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분석하여, 국제 표준에 부합하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의미를 담은 분류체계를 도출함으로써,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.

2.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

□ 주요 분류체계 현황

-
- EU분류체계 권고안은 6대 환경목표에 대한 부합 여부로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판별하는 체계
 - 인정 기준으로 생애주기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장기적인 기술 개선사항을 반영한 기준치를 제시
 - 경제활동을 ‘녹색 활동’, ‘과도기적 활동’, ‘지원 활동’으로 세분화한 점이 특기할 만함.
 - 중국의 분류체계에서는 계층화된 구조 내의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 일정 수준의 가치사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음.
 - 활동별 인정 기준은 대부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언급하는 형식이나, 단순 설명만 있거나 기술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.
 -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와 건설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나, 가스발전은 터빈 제조와 함께 첨두부하용 등으로 제한된 활동만 인정
 - CBI의 분류체계는 세부 항목을 ‘자산’ 기준으로 그 유형과 내용별로 구분함.
 -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들이 가치사슬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‘지원 활동’(enabling activities)이 폭넓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.
 - 인정 조건도 ‘자산’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이 단편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음.
 - 일본과 영국은 ICMA의 녹색채권원칙(GBP)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제시함.
 - ICMA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녹색채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왔음.
 -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활동 형태 등을 규정하지는 않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함.

□ 분류체계 비교 분석

- 구조적 측면에서, EU의 분류체계는 ‘경제활동’ 한 단위 전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하위 가치사슬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 - 중국 분류체계는 계층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나, 개별 활동 단위에 하위 활동이 포함되는 구조는 아님.
 - CBI의 분류체계는 개별 활동을 구성하는 가치사슬 상의 하위활동의 기여도까지 파악이 가능한 구조임.
- 기술 선별방식 측면에서, EU 분류체계의 에너지부문은 기준치 제시와 목록 배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에너지전환 관점에서의 중요도 파악이 어려움.
 - 중국 분류체계는 공통된 인정기준이 부재하거나 법령 및 지침 중심이어서 특정 기술 배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.
 - CBI의 분류체계는 가치사슬의 세분화 속에서 인정 가능한 하위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
- 에너지전환 구현 측면에서, EU의 분류체계는 궁극의 ‘녹색 활동’과 더불어 많은 경제활동을 ‘과도기적 활동’으로 분류
 - 중국 및 CBI 분류체계는 과도기적 활동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.

□ 분류체계 구축방안 도출

- 주요 분류체계를 관찰한 결과,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.
 - 지속가능성 관점의 절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친환경성을 판단할 경우, 장기적인 탄소중립 경로에 필요한 점진적 개선활동은 배제될 수 있음.

- 에너지전환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원·부문 간의 융합, 즉 시스템 통합적인 측면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음.

○ 주요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 제시

- 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하위 활동, 즉 ‘지원 활동’ 차원에서 기존 산업분류체계와의 연계 및 가치사슬 상세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-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현실 간의 간극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중간단계의 투자처를 제공이 필요함.
- 분류체계들의 접근법인 ‘네거티브 스크리닝’은 여러 ESG 투자전략 중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여 장기적 목표 하에서의 통합적인 투자로 확장이 필요함.

○ 분류체계 개선안을 예시로 도출

- 계층화 및 경제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을 ‘가치사슬 레벨’에서 상세화
- 에너지전환이 에너지원 및 부문 간의 변형과 융합을 통해 시스템 통합으로 나아가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
- 궁극의 ‘녹색 활동’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기술 간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하면서 ‘과도기적 활동’이 경시될 가능성을 최소화

3. 결론 및 정책 제언

□ 정책 제언

○ ‘탄소중립’ 개념의 확장 필요

- ‘녹색’ 분류체계가 ‘탄소중립’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- 이를 위해, 전환금융(Transition Finance) 개념을 확대하여 기본 원칙에 부합하면서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.
- 장기적인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과 연계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경로에 대한 안내와 재무적 편익도 보장함.

○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

- 정부의 각종 에너지 관련 계획의 세부과제를 분류체계와 연계 필요
- 보조금 외에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부문 중 분류체계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분류체계 중심으로 각종 지원 및 투자 집행

□ 결론

-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‘녹색’ 분류체계가 기존에 영위하던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, 단계적 이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의 여부임.
- 분류체계를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이행경로 및 로드맵과 연계시켜 관련 투자에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